

대선캠프의 호객행위? 그들보다 합리적인 재야의 주장



월급 200만원, 모병제 전환 등 대통령 후보들, 무책임 정책 남발

선택적 징병제, 직업적 예비군 등 장병들, 현실적 정책 아이디어 제시

디어는 대선캠프가 아닌 재야의 군사마니아와 일선 장병들 쪽에서 나온다. 최근에 만난 일선부대 지휘관은 '선택적 모병제'가 아닌 '선택적 징병제'라는 역할상을 제시했다.

이 지휘관의 이야기를 요약하면 ▲ 심신이 강건한 남여 모두를 징병 ▲ 병의 의무진급 계급 수를 줄이고 분대장 교육을 받은 자를 상·병장으로 진급 ▲ 부사관의 민간지원은 특수기술직에 한정하고 상·병장급 우수자 중심으로 선발 ▲ 분대장급 이상 군복무 경력자에게 미국의 G.I 빌과 같은 학자금 전

액지원 ▲ 고급장교로의 진출확대가 핵심이었다.

스웨덴이나 노르웨이처럼 남여에게 병역을 부과하되, 군사복무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면 우수인력들이 군을 선호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전 국민이 징병검사를 받더라도 선발된 극소수만 군에 입대하게 되고 그 복무경력을 가진 자는 남녀 구분없이 사회에서 자연스레 존중받는 문화가 정착되는 것이다.

한 예비군지휘관은 '직업적 예비군'과 '은퇴자 활용'을 예비전력 정상화 정책으로 제시했다. 더불어 민주당을 중심으로 '투잡예비군법'이 지난해 12월 입법화됐지만 정작 여당 의원들은 퇴역자원의 재활용에는 소극적이었다.

이 예비군 지휘관은 "현역복무가 어려운 일부를 예비역으로 전환시키되 각자의 여건에 맞는 지역과 보직을 편성해 군의 하리총을 두텁게 하자"면서 "병

으로 전역한 자라도 사회에서 쌓은 경력과 기술 등을 고려해 부사관 장교로도 진급시킨다면, 튼튼한 인재풀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미군의 경우 퇴역자가 군에 재복무해 장군에까지 이른 성공사례도 있다. '원자력 해군의 아버지'라 불리는 하이먼 리코버 대장은 82세에, 프로그래밍 언어 '코볼'을 만든 그레이스 호퍼 준장은 80세에 각각 완전한 은퇴를 맞이했다.

그들의 전문성이 의회에서 인정됐기 때문이다.

일본 자위대도 '새로운 복무제도'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퇴직자위대 O.B들을 시프트제로 복무시키고 있다. 젊은 층이 가지지 못한 노련미와 전문성을 살리면서 '노인 일자리'까지 만들어냈다. 이직률이 심각한 한국군의 행정직 군무원의 과도한 선발보다 안정적일지 모른다.

군인의 의식주에 해당하는 '전력지원물자'와 '실전적훈련장비'의 우수제품 확보를 위해 '군복 및 장구류 단속법'과 '총포법의 모의총포 기준'을 완화하자는 주장도 '밀심(MILSIM)' 유저들 사이에서 제기된다. 실전과 유사한 환경에서 6mm플라스틱 비비탄으로 모의교전 경기를 펼치는 밀심경기는 세계적인 스포츠이자 산업으로 자리잡았다.

밀심용 에어소프트건 제작 등 다양한 '군사문화사업'을 펼치는 대만 G&G사의 연매출은 1조원이 넘는다. 작은 봉제업체였던 대만 J-TECH사는 미군에 봉제제품을 납품하는 회사로 성장했다. 이들 업체들은 대만군에서도 환영받는다. 정치인들이 조금만 시야를 넓게하고 생각을 깊이한다면 군과 경제의 심장이 유통되는 정책이 나올 것이다.

/captinm@metroseoul.co.kr

대통령선거 구도가 복잡해지면서, 여·야 대통령 후보의 국방안보공약도 포퓰리즘의 액션레이터를 맡고 있는 모습이다. '얼마까지 보고 왔어', '잘해드릴게', '그거에 이거 얹어드려'식의 호객행위가 연상될 정도다.

다가올 인구절벽으로 인한 우수인재 확보와 전문성, 그리고 산업과 사회의 활력공급이라는 다양한 측면이 결합된 국방안보공약보다 눈 앞에 바로보이는 '월급200만원', '모병제전환', '학군장교 복무기간 단축'과 같은 무책임한 정책만 던지고 있다.

취재현장을 돌다보면 현실적인 아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설 이후 지급

기재부, 이번주 14조 추경편성안 마련 손실보상 재원 3.2조→5.1조 증액 내용 신청 등 절차 거쳐 내달 중순 집행 예상

정부가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에게 주는 300만원 가량의 방역지원금은 설 명절 이후에나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데다 사업 공고 등 절차가 남아 설 전 지급은 불가능하고, 빨라야 다음 달 중순쯤 가능할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지난 14일 소상공인 추가 지원 내용을 담은 추경안을 밝힌 정부는 다음 주 중 14조원 상당의 추경 편성 방안을 마련해 국무회의 의결을 마친 뒤 이달 마지막 주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 추경안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300만원 상당의 방역지원금을 추가 지급하고,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을 기존 3조2000억원에서 5조1000억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소상공인의 피해 상황을 고려해 추경 집행까지 속도를 낸다는 입장이다. 이달 말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의 세부 사업 집행 계획과 각종 방역 지원 패키지 등 세부 내용을 이번 주 중 확정할 계획이다.

문제는 정부가 자체 예산으로 지급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방역조치 연장 및 소상공인 지원관련 정부합동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지난번 방역지원금과 달리 이번에는 여야 합의를 통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이다.

이르면 다음 달 중순경 지급을 시작한다는 정부 계획과 달리 최소 한 달 이상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17일 발표했던 소상공인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은 실제 지급이 시작된 27일까지 단 10일이 걸렸다. 500만원의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도 발표 이후 첫 지급까지 약 3주 가량 걸렸다.

방역지원금의 경우 정부가 기정예산과 기금, 예비비 등을 통해 3조2000억

원 가량의 자금을 자체적으로 마련해 가능했던 일이었다. 손실보상 선지급도 올해 본예산에서 반영된 자금의 집행 시기만 앞당겨 이뤄졌다.

여당은 추경안 관련 정부의 행정 절차가 끝나는대로 다음 달 10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대선 선거운동이 15일에 시작되는 점을 고려해 14일에는 추경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추경안이 의결되더라도 관련 사업 공고와 신청 등 방역지원금 집행 절차를 끝아야 해 실제 집행은 다음 달 중순 이후에나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유력하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

안전장비 구매 사업장에 5000만원 지원

고용부, 예산 5억5700만원 마련 친환경 소재 사용제품 등 우선지원

올해 안전모 등 산업 현장 내 안전보호장치나 유해·위험 기계 및 방호장치·보호구 제조 사업장이 대상이다. 여성 등 취약계층 대상 제품이나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안전인증품 개발 등을 우선 지원한다.

5억5700만원이다.

공단에 등록된 유해·위험 기계 및 방호장치·보호구 제조 사업장이 대상이다. 여성 등 취약계층 대상 제품이나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안전인증품 개발 등을 우선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15개 제조업체가 총 5억 2400만원을 지원받았다.

사업장당 평균 연구개발 자금 4700만

원, 시험장비 구매 자금 2800만원이 각각 지급됐다.

특히, 지난해 연구개발자금 지원을 받아 개발된 안전모는 얼굴 전체를 보호할 수 있는 보안면 일체형으로 특허 출원하기도 했다.

올해 사업 지원 신청은 다음 달 18일 까지 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류 양식을 작성한 후 공단 산업안전보건인증원으로 접수하면 된다. 지원 결과는 3월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세종=원승일 기자

공정위, 과징금 1억1200만원 부과

패션그룹형지가 대리점에 의류 운반을 지시하면서 비용 전액을 대리점에 전가하는 갑질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패션그룹 형지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에 운송비용을 전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1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패션그룹 형지는 2014년 1월~2019년 12월까지 자신의 의류상품을 보관하고 있는 대리점에 다른 대리점으로 행낭을 이용해 운반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소요되는 운송비용을 대리점에게 전액 부담시켰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는 공급업자의 필요에 의해 발생하는 운송비용을 일방적으로 대리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대리점법 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한 불이익 제공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한편, 패션그룹형지는 30~60대 여성 브랜드인 크로커다일 레이디, 올리비아 하슬러, 샤크렌을 판매하고 있으며, 2020년 기준 매출액은 2285억원 규모다.

법학도 대상 '통상법무 인턴과정' 발족

산업부, 인턴 2명 2주간 실무 체험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국내 법학도들을 대상으로 하는 통상법무 인턴 과정을 발족한다고 밝혔다.

통상법무 인턴 과정은 통상분야 전문 기관에 지망하는 학생들이 방학기간 중 산업부에서 통상법 실무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산업부는 법학을 전공하는 학부생,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지원을 받아 이지우 씨(고려대 일반대학원 법학과)와 김정훈 씨(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2명을 통상법무 인턴으로 선발했다.

이들은 17일부터 28일까지 약 2주간 산업부 통상법무기획과와 통상분쟁대응과에 각각 채용돼 통상법 실무를 체



험하게 된다.

이들은 WTO 분쟁, 외국의 수입규제 정책 등 주요 통상 현안에 관해 해당 부서의 지도·평가를 받으면서 연구과제를 수행하며, 정부의 통상분야 및 수입규제 대응 업무에도 참여해 법률검토·자료조사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 기자